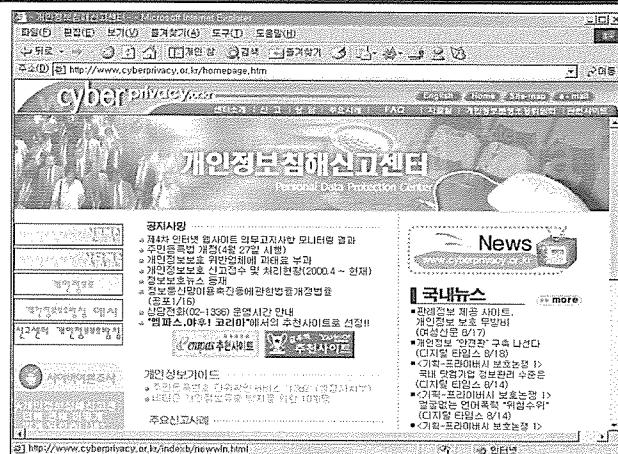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인식 아직 낮아

많은 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체의 노력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맞춰 국내 인터넷 사이트 3백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의무 준수도 차츰 향상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보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①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②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③개인정보의 이용·보유기간 ④개인정보의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⑤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백40개의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와 제3자에 제공하는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항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화번호를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전화를 기재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요구사항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회원탈퇴 방법이 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중 1백20개 사이트(40%)만이 이용자가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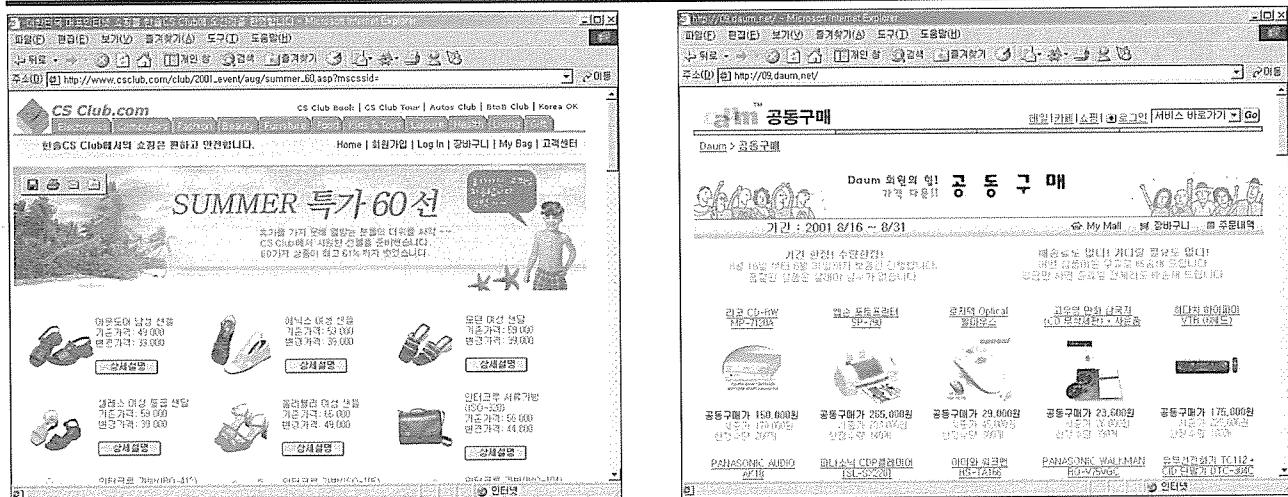


에서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을 뿐이다. 나머지 1백11개 사이트(37%)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탈퇴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69개 사이트(23%)는 아예 회원탈퇴 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 또 개정안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의무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아동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약관 등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된 경우는 30%(90개 사이트)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경우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고지될 뿐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동 법률 상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체의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 공동구매 인기 상한가

신청자가 많이 모일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공동구매가 알뜰쇼핑을 선호하는 네티즌의 쇼핑스타일과 맞물려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공동구매는 PC통신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신제품 한정판매가 시초. 동호회 회원들은 시장진입을 노리는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한정수량 공급받아 먼저 사용해본다는 장점이 있고,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는 신제품의 시장성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사전 검증

받는다는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네티즌의 대량구매력을 바탕으로 박리다매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 중소기업의 신제품 뿐 아니라, 기획상품, 인기 상품 등도 공동구매의 바람을 빼며 갈 수는 없게 됐다. 공동구매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인기를 끌면서,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공동구매 코너를 별도로 갖추고 쇼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인터넷 쇼핑



몰 한솔CS클럽(www.csclub.com)은 공동구매 매출액이 1/4분기 월평균 5억원에서 지난 7월 20억원을 넘어선데 힘입어, 10월까지 공동구매 품목을 5배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www.auction.co.kr)은 공동구매로 80억원의 매출을 올려 B2C부문 총매출의 50%를 초과했고,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지난 4월에만 공동구매로 28억원의 매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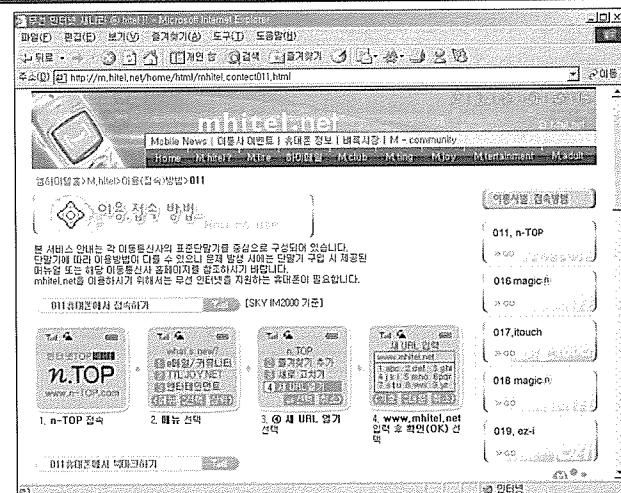
올려 전체 쇼핑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무이자 할부, 무료 배송 등의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공동구매 가격이 타업체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과열경쟁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또 마진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외형만 부풀리는 실속 없는 공동구매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선메일 시스템 무료로 구축하세요

휴대전화나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등의 무선기기를 이용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무선메일 시스템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배포된다.

한국통신하이텔(대표 최문기)은 무선인터넷 솔루션 전문 기업 아이소프트(대표 이철호)와 공동으로 '기업용 무선메일 솔루션'을 개발하고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m.hitel.net/masp>)를 통해 무료 공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 없이 기준에 사용하고 있던 유닉스, 윈도우 NT 등의 웹서버에 손쉽게 설치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모바일 오피스 구현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솔루션 구입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이 무선메일 솔루션은 아이소프트가 개발을, 한국통신하이텔이 엠하이텔(<http://m.hitel.net>)이 서비스 운영을 담당한다. 양사는 이번 솔루션 무료 제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을 지속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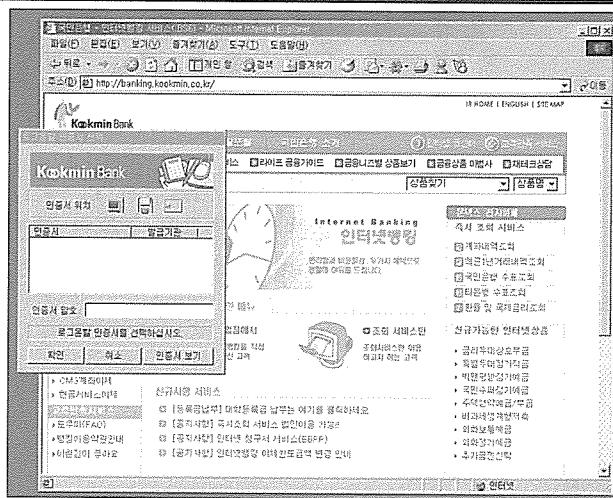
인터넷 뱅킹, 은행 가지 않고도 척척

인터넷 뱅킹 이용객수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은 휴일이나 은행 업무마감 시간 이후에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물론 여기에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우대정책도 한 몫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인터넷을 통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 증가 할수록 은행은 창구유지비용 등 제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예금 가산금리,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 뱅킹 등록자는 지난 해 대비 6배 증가한 7백43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은 6월에만 7천5백만건으로 3월 대비 7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금융서비스 중 인터넷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가 43%, 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율이 37%, 그리고 전화를 이용



한 텔레뱅킹도 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점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 로이터 온라인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터넷이나 전화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전통적인 방식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매리츠 리서치의 조사결과를 8월 9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은행 창구 47%, 자동화기기 18%,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은 4%에 불과했다.

2005년 e-Recruit 시장 13조원 규모에 달할듯

인터넷을 이용한 채용규모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세계적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e-Recruit 시장이 2000년 2조원 규모에서 2005년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재채용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e-Recruit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IDC에 따르면 현재 e-Recruit 시장이 제일 큰 곳은 북미 지역으로, 기존의 단순한 구인구직 광고를 뛰어넘는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5년까지 e-Recruit 시장이 누적연평균성장율(CAGR) 67%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e-Recruit 업체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유럽은 북미지역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서유럽은 최근 e-Recruit가 가장 활발한 곳이 되고 있다. IDC는 e-Recruit 업체들이 지역에 따라 적절히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IDC의 디렉터 엘렌 줄리안은 “인재채용에 관해서는 각 지역별로 독특한 점이 있으므로, e-Recruit 업체는 해당 지역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李 懸 (동아사이언스 기자)